
기업의 농축산업 생산 진출의 비현실성

장 상 환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이사장, 경상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changsh@gnu.ac.kr

1. 머리말
2. 기업농 찬성과 반대 논리
3. 기업의 농업생산 진출 실태
4. 기업농 도입의 비현실성
5. 대기업 농업 진출 규제 방안

기업의 농축산업 생산 진출의 비현실성

1. 머리말

LGCNS가 전북 군산 새만금산업단지 1공구 76.2ha에 올해부터 2022년까지 7년간 3800억 원을 들여 '스마트 바이오 파크'를 조성하고, 전문 재배회사가 이 중 50ha에서 토마토와 파프리카를 생산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스마트 바이오 파크는 한국형 스마트팜 설비와 솔루션 개발 등 과학영농 기술개발과 국내 시설원에 생산성 향상, 해외 설비 시장 진출을 위한 첨단 시설원에 연구 실증단지라고 한다. LGCNS는 설비와 솔루션 공급, 운영 서비스를 제공할 뿐이고, 해외 전문재배회사가 전량 수출을 전제로 작물 재배를 전담하며, 농민들이 원할 경우 재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한다.

이에 대해 농민단체들은 엘지의 농업 진출이 국내 시설원에 농가를 붕괴시킬 것이라면서 반대한다. 9월 21일 세종시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LG CNS는 국내 농업발전에 저해되는 사업은 하지 않겠다고 새만금스마트바이오파크 사업의 철회 입장을 공식 선언했다. 그러나 LG CNS는 기존에 사업을 추진하려 했던 1공구에 다시 사업자를 모집하는 일반경쟁입찰이 진행될 경우 농민단체를 설득해서 함께 사업 입찰에 참가하거나 매립과 부지조성공사가 진행 중인 2공구나 5공구 등 다른 부지에다 스마트팜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경우 기존에 유치했던 해외 자본이 아니라 새롭게 자본을 구성해서 사업을 재추진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¹⁾

2. 기업농 찬성과 반대 논리

1) 기업농 찬성 논리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6일 마르크 뤼테 네덜란드 총리의 한국 공식방문을 맞아 네덜란드 농업으로부터 배워야 할 3가지 키워드로 오픈경쟁, 첨단농법, 협업체계를 제시했다. 네덜란드가 자국 농업을 보호하는 대부분 유럽 국가와 달리 농업시장을 개방했고, 원예 작물을 생산하기에 좋은 자연환경을 갖고 있지 않지만, 유리온실과 수경재배 등 새로운 농법을 개발하고 생산성을 높였으며, 또 컴퓨터와 스마트폰으로 농장을 관리하는 '스마트팜'을 이용해 노동력을 줄이고 있다. 또한 네덜란드의 산업과 정부, 학계는 함께 농업을 연구하고 연구성과를 현장에 적용, 교육을 통해 성과를 확산하고 있다. 그 결과 네덜

1) "LG CNS, 새만금 스마트팜 재추진 검토... '사업 계속할 것'". SBS 2016.10.04.

4 농정의 우선 순위는?

란드는 국토 면적이 한국의 약 42%에 불과하지만, 양국의 경작 면적은 160만~180만 헥타르 수준으로 비슷하다. 농가 수는 한국의 약 5.8%인 6만5천여 가구로 가구당 평균 경작 면적이 한국보다 20배가 높다는 것이다. 전경련 엄치성 상무는 "농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농업의 기업화가 필요하며 농업인도 기업인 마인드를 갖출 필요가 있다"며 "대규모 농사를 지으려면 유리온실, 수경재배와 같은 첨단농법의 도입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대기업의 농업 진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부 농업경제학자도 찬성 논리를 편다. "시설원예의 국제 경쟁력은 아직 취약하다. 확고한 경쟁력을 갖춘 고부가가치 수출산업이 되려면 새로운 기술혁명을 거쳐야 한다. 정보통신기술과 광범위한 첨단 융복합 기술을 접목하는 스마트팜 개발·보급에는 정부보다 기업이 더 적합할 수 있다. 기업은 제한적 영농 참여를 통해 한국형 스마트팜 모델을 개발·개선하고 농가에 보급·확산해 기업과 농민이 상생할 수 있을 것 같다."²⁾

여러 언론들도 기업의 농업 진출을 적극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편다. "농업과 ICT 융합은 세계적 추세다. 네덜란드가 세계 2위 농업 수출국으로 성장한 비결이 바로 스마트팜이다. ---일본도 최근 기업의 농지 소유를 자유화하는 파격적인 규제 철폐에 나서는데 '농업 보호주의'에서 벗어나고 있다. --- LG 측은 이번 사업의 목적이 ICT를 접목해 개발한 설비를 시장에 보급하는 것이라고 했다. 스마트팜 생산 작물은 모두 수출하며 해외투자자도 국내 농작물 판매는 금하는 조건까지 걸고 계약했다. --- 농림축산식품부는 2012년 동부팜한농이 경기 화성에 수출용 토마토를 재배할 유리온실을 지었다가 농민단체의 반대로 사업을 접었던 전례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행정력을 발휘해야 한다."³⁾

"이미 세계 농업은 몬산토(미국), 신젠타(중국) 등 연 매출 10조원이 넘는 거대 기업들이 종자와 신종 작물 개발을 주도한 지 오래다. 유독 우리나라만 기업의 농업 진출이 원천 봉쇄되고 있다. --- 농촌 경제를 되살리려면 결국 새로운 투자와 신기술 도입을 통한 생산성과 경쟁력 제고가 절실하다. 그러려면 농민들 스스로 기업 투자의 길을 터주고 이들과 상생하는 것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 농민들이 "농사는 농민만 짓는 것"이라고 고집한다면 농업의 미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다."⁴⁾

"고부가가치 농업을 육성하려면 대규모 시설투자가 필요하고 해외로 적극 진출해야 한다는 것도 그렇다. 만약 농민단체 주장대로 일체의 기업형 투자를 막으면 무슨 수로 선진농업을 하자는 건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⁵⁾

정부 기업농 육성정책

2009년 이명박정부가 농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농정 패러다임을 ▲개별농가→기업형 주업농 ▲비농업계의 자본투자 제한→민간투자 활성화 ▲농업보호·특별지원→경쟁·시장중심 등으로 전환하면서 대기업의 농업 진출이 본격화됐다. 2009년 3월 이

2) 김한호, "기업의 농업 진출, 막아야만 하나", 『서울신문』, 2016. 8. 20.

3) "새만금 스마트팜 반대 '정치 농민'에 휘둘러서야", 동아일보 사설, 2016. 7. 7

4) "農業에 기업 진출 길 터줘야 농촌 경제 앞날 밝아질 것", 조선일보 사설, 2016. 7. 7

5) "농업 첨단화가 기업 투자없이 어떻게 되겠나", 한국경제 사설, 2016. 7. 7.

명박 정부는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민관 합동의 '농어업선진화위원회'를 발족시켰다. 위원회는 3대 핵심과제로 '농업의 경쟁력 확보', '농촌에서의 삶의 질 보장', '농어업인의 소득 보장' 등을 선정했다. 이를 위해 농업구조도 해외선진농업국과 같이 생산주체를 기업형·주업농 중심으로 바꾸겠다는 것을 위원회의 1차적인 목표로 삼았다. 위원회는 거대자본을 가진 대기업을 농축산업에 참여시켜 대규모 농업회사를 육성하는 것을 추진했다. 이전에는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대표가 농민이고 법인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2분의 1 이상이 농민이라야 했다. 하지만, 2009년 5월 '농지법' 개정 이후 대표자가 굳이 농민일 필요가 없어졌다. 또 법인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가운데 농민 구성원 요건은 3분의 1 이상으로 완화됐다.

축산업 분야를 기존 축산법 제 27조는 모든 500두 이상의 양돈업, 5만수 이상의 양계업(농식품부령 32조) 등 일정규모 이상 축산업에 대한 대기업(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에 따른 출자총액제한기업에 속하는 회사)의 참여를 금지하도록 명시했다. 그러나 농림수산물식품부는 2009년 1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농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보고하면서, 농업분야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일환으로 '대기업의 축산업 참여제한조항 삭제'를 추진, 2010년 1월 법률 조항이 삭제됐고 대기업의 축산업 진출이 합법화됐다. 더불어 2009년 3월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 9554호)'의 개정으로 출자총액제한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출자총액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축산업 참여가 가능하게 됐다. 대기업의 양돈업 진출을 돕는 법이 2012년 말부터 속속 제정되었다. 2012년 12월과 2013년 3월에는 '가축계열화 사업자의 범위 및 지정방법' 고시와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이 각각 제정됐다. '가축계열화 사업자의 범위 및 지정방법' 고시에는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따른 특례규정(이라 "특례규정")」에 따라 수직계열화와 수평계열화, 혼합계열화 등의 사업형태도 사료의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또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계열화사업의 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축산계열화사업 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고 명시되었다. 이것은 수직계열화사업 역시 일반 축산농가와 마찬가지로 사료 및 석유류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음을 법으로 명확히 한 것이다.

기업농 도입 반대 논리

"시설원예농가 붕괴. 실증생산단지 및 전량 수출은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 50ha 생산단지에서 파프리카가 생산되면 현재 전체 수출되는 양보다 많을 정도이며 설사 전량을 수출한다고 해도 해외에서 저가 경쟁이 이뤄질 뿐 아니라 국내시장 과잉공급으로 이어지고 이로 인해 중소 영세농가부터 무너지게 됨. 특히 올해 부채만 쌓인 토마토농가, 수출경쟁력이 떨어지는 파프리카 농가는 LG 농산물의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음"⁶⁾

대기업 자본의 농업 진출을 우려하는 이유는 "자본의 농업 진출은 필연적으로 농업생

6) 전국농민회총연맹, "LG CNS 농업진출 현황과 대응", 2016. 7. 13.

6 농정의 우선 순위는?

산의 규모화와 집중화를 가져오고, 이는 소농구조의 붕괴를 유발하기 때문"이고 "농업이 생산하는 다원적 기능의 약화"를 초래하기 때문이다.7)

3. 기업의 농업생산 진출 실태

사육, 사료, 유통 등 전후방 산업에 걸쳐 축산분야 대기업의 진출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협경제연구소가 2013년 4월 발표한 '대기업의 축산업 참여 동향과 문제점'에 따르면 하림그룹, 사조그룹, 이지바이오시스템그룹, 동원그룹 등 대기업의 축산업 참여로 사육, 사료, 유통분야의 시장 독과점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사육분야의 경우 대기업 중심의 계열화 사업을 중심으로 사육분야의 시장지배력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양돈산업의 경우 상위 5개 업체의 시장 점유율이 지난 '10년 18.5%에서 '12년 20.8%로 2.2% 증가했다. 배합사료도 인수·합병을 통한 사료기업의 계열그룹화가 급속히 진행 중이다. 양돈사료의 경우 상위 3개 업체의 시장점유율이 2007년 33.7%에서 2011년 34.0%로 0.3% 증가했다. 농협경제연구소는 사육일수가 짧은 중·소가축 위주로 대기업의 계열화가 확대되기 쉽다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 2012년 계열화 비율은 오리 95%, 육계 91%, 토종닭 65%, 돼지 25%로 나타나고 있다.

<표 1>에서 보는 것처럼 현재 국내 대기업 중 농업분야에 진출한 대기업은 8개 그룹 25개사인 것으로 집계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이 9월 26일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밝힌 바에 의하면 2016년 4월 기준 국내 기업집단 가운데 농업분야에 진출한 대기업은 CJ, 아모레퍼시픽, 카카오, 하림, 하이트진로, 한화, 현대자동차, 농협 등 총 8개 기업집단의 25개 계열사에 이르고, 이들 농업분야 진출 국내 대기업들의 총매출액은 지난해 기준으로 4364억 75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공개시스템(OPNI)를 통해 농림축산식품부가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이들 농업분야에 진출한 국내 대기업 가운데 가장 많이 진출한 기업집단은 양돈, 양계, 젓소사육업, 조류사육업, 축산업 등에 진출한 '하림'이다. 하림그룹은 2007년 돈육 가공업체인 선진을 인수하며 양돈업에 진출했다. 2008년에는 대상그룹의 축산물 사육·가공 사업 부문인 대상 팜스코의 지분 65%를 인수했다. 하림은 양돈업인 농업회사법인 (주)선진한마을을 비롯해 15개 회사를 거느리며, 3218억 4700만원의 매출액을 기록했다.

또한 양돈, 양돈정액판매업을 영위하는 CJ돈돈팜(주),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재배업의 CJ브리딩(주) 등 2개 회사에 진출한 CJ 기업집단이 약 482억 8800만원의 매출액을 기록했다. 아모레퍼시픽도 2007년부터 음료용 및 향신용 작물재배업인 농업회사법인 (주)오설록농장에 진출해 134억 4300만원의 매출액을 기록했다.

또한 388억 7600만원의 매출액을 기록한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재배업을 영위하는

7) 양승룡, "대기업 자본의 농업 진출을 반대하는 이유", 『농민신문』, 2016. 7. 27

주)현대서산농장을 비롯해 (주)서림환경기술(젓소사육업), (주)서림개발(채소작물재배업)이 계열사로 있고, 하이트진로도 지난해 12월, 과실재배업인 농업회사법인 (주)팜컬처를 설립했으며, 한화도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재배업인 농업회사법인 (주)그린투모로우를 2010년에 설립했다. 이 밖에도 카카오는 채소작물재배업인 농업회사법인 (주)만나씨이에이를 2013년 3월에 설립했으며, 농협은 종자 및 묘목생산업을 영위해 2015년에 135억 1900만원의 매출액을 기록한 농업회사법인 (주)농우바이오를 지난 1990년에 설립해 2014년 계열에 편입했다.

표 1. 국내 대기업의 농업분야 진출현황

단위 : 백만원, 직전사업년도말 기준

기업명	회사명	설립일	계열 편입일	자본금	매출액	세부 업종
농협	농업회사법인 (주)농우바이오	1990.06	2014.10	7,150	13,519	종자및묘목생산업
씨제이	씨제이돈돈팜(주)	2004.07	2004.08	30,799	48,288	양돈,양돈정액판매업
	씨제이브리딩(주)	2015.03	2015.04	1,000	-	곡물및기타식량작물재배업
아모레 퍼시픽	농업회사법인 (주)오설록농장	2007.04	2007.04	5,083	13,443	음료용및향신용작물재배업
카카오	농업회사법인 (주)만나씨이에이	2013.03	2015.10	1,508	72	채소작물재배업
하림	농업회사법인 (유)그린피그팜스	2008.07	2009.02	1,000	3,337	양돈업
	농업회사법인 (주)봉화	2009.06	2009.06	100	380	젓소사육업
	농업회사법인 (주)봉화제네틱스	2012.06	2012.06	200	-	양돈업
	농업회사법인 (주)한사랑	2010.07	2010.07	900	4,177	양돈업
	농업회사법인 (주)정운	2007.09	2008.08	2,400	3,652	양돈업
	농업회사법인 (주)익산	1995.10	1995.10	254	172	축산업
	농업회사법인 (주)보람	2004.02	2007.09	1,003	20,896	양돈업
	농업회사법인 (주)유전자원	1989.12	2007.09	1,158	16,028	양돈업
	농업회사법인 (주)제일종축	1973.11	2007.12	6,550	22,090	양돈업
	농업회사법인 (주)선진한마을	1999.02	2007.09	1,000	129,515	양돈업
	농업회사법인 (주)팜스코바이오인티	2014.02	2014.02	17,469	27,973	양돈업
	농업법인 (유)진천오리인티	2002.03	2002.03	300	32,874	기타가금류및조류사육업
	농업회사법인 (유)에이치비씨	2007.07	2007.07	100	28,009	양계업
	농업회사법인 (주)피그앤그린	2010.12	2010.12	2,000	29,958	양돈업
	농업회사법인 (주)포크랜드	2003.06	2009.06	2,500	2,786	양돈업
하이트진로	농업회사법인 (주)팜컬처	2015.12	2016.02	900	-	과실재배업
한화	농업회사법인 (주)그린투모로우	2010.02	2010.04	5,668	343	기타시설작물재배업
현대 자동차	(주)현대서산농장	2005.04	2011.04	6,200	38,876	곡물및기타식량작물재배업
	(주)서림환경기술	2009.01	2009.02	12,000	13	젓소사육업
	서림개발(주)	1981.10	2009.02	13,500	74	채소작물재배업

*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공개시스템(OPNI, 2016.4)

* 음영으로 표시한 씨제이 돈돈팜(주), 씨제이 브리딩(주), (주)서림환경기술, 서림개발(주)는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이 아님

김철민의원실 “국내 대기업 농업분야 진출, 8개 그룹 25개사” 국정감사 보도자료, 9. 26

8 농정의 우선 순위는?

경종업에는 아직 대기업의 농업생산 진출이 미약한 편이다. 2013년 설립된 만나씨이에이는 농민이 주도해 설립한 농업회사법인으로 카카오 등 외부자본의 지분투자를 받은 경우이다. 2014년 충북 진천의 장미재배농장 700평을 2억원에 인수해서 1만9800m²(약 6천평)의 온실에서 60명이 일하고 있다. 외부 자본 12억원을 유치했고, 2016년 매출액은 100억원으로 예상된다. 2015년 10월 19일 카카오의 투자전문 자회사 케이벤처그룹(대표 박지환)은 만나씨이에이 지분 33% 수준의 투자를 진행했다고 발표했다.

4. 기업농 도입의 비현실성

1) 자본주의적 기업농 제약과 가족농 존속의 이유

일부 논자들은 전문화, 표준화, 집중화가 농업의 산업화에서 핵심적 과정으로 농업생산도 공업생산과 동일한 성격을 갖게 만든다고 주장한다. 규모의 경제가 작동하여 덜 자본화된 생산자를 구축할 것이고 농업생산은 소규모의 농업자본가들 손에 장악된다. 대규모 기업농장의 성장은 축산물 생산에서 농업변화의 중요한 측면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그러나 자본의 집중과 집적과 자영업자의 양극 분해 논리에도 불구하고 농업 부문에서는 이러한 법칙이 잘 관철되지 않고 가족농은 해체되지 않고 끈질기게 존속해왔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농업과 제조업을 등치시킬 경우 핵심적 문제는 식품시스템의 특수성과 그러한 특수성으로 인해 농업생산자들이 가치를 생산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고려하지 못한다는 데 있다. 농업 생산은 공업과 달리 자본이 직접 뛰어드는데 여러 장애가 있다.

생물학적 과정의 위험과 불확실성

농업은 자연적 생물학적 과정에 많이 의존한다. 농업생산은 기후, 곤충, 질병, 부패 등의 환경과 생태적 과정에 따르는 위험과 불확실성에 취약하다. 가뭄과 홍수, 장마, 냉해, 병충해 등 기후와 생태에 따른 위험 부담이 크다. 동식물은 성장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계절의 변화에 따라 성장이 촉진되기도 저해되기도 한다. 생산과정을 통제하거나 가속시키는 데 물리적 한계가 있다.

노동시간과 생산기간의 불일치

농업분야에서는 생산기간이 노동시간 보다 길다. 생산기간은 식물과 가축의 자연적 성장 리듬을 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노동기간과 생산기간이 일치하지 않는 것은 불변자본과 가변자본의 효율적 이용과 유통과 실현과정의 원활한 작동을 저해하며, 결국 이윤율을 낮추는 작용을 한다. 가족농이 존속하는 이유는 자기착취를 할 수 있는 가족노동의 능력이나 기술의 적용에 있는 것이 아니고, 자본주의의 논리와 본질 그 자체에 있다.

가족 노동의 신축성

가족농은 자신의 순수익을 생산 확대, 가족 소비 또는 생산요소에 대한 투자로 나누는데 다른 경영주체들에 더 신축적이기 때문에 이윤 획득에 초점을 둔 산업적 형태의 농장과 성공적으로 경쟁할 수 있다. 기업농이 이윤이 실현되지 않을 경우 쉽게 몰락하는 것에 비해 가족농은 상황이 어려울 때 더 잘 견딜 수 있다.

고용노동의 과도한 거래비용

가족농의 경우 거래비용이 절감된다. 거래비용은 소유권을 경제적 자산으로 전환하고 자산을 가동시키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여기에는 계약을 모니터하고 실행시키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한다. 첫째, 농업생산은 작물별로 지역별로 재배기술의 특수성이 있다. 농가 가족은 성장과정에서 농업생산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충분히 교육받은 장점이 있다. 둘째, 기술적 이유로 농업노동력은 한 장소에 집결시키거나 쉽게 감독하기 어렵다. 작업과 성과를 연결시키기 어렵다. 연결시키려면 많은 과도한 비용이 든다. 이 때문에 농장에서는 고용노동보다 가족농이 더 유리하다. 가족농은 고용노동력을 감시하고 감독하는 어려움에 대한 최적 해결책이다. 농장 규모가 커지고 고용노동력이 많아질수록 거래비용이 증가하는 것이다. 셋째, 농업생산에서는 노동계약이 더 어렵다. 노력은 관찰하기 어렵고 결과는 노력과 바로 직결되지 않고 그 후의 단계에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특징과 통제와 감시 비용의 저렴함 때문에 가족농은 산업적 농업의 압력을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이다. 중국과 구 소련의 집단농장이 이러한 노력과 성과간의 연결을 통한 효율성 증대에 실패하면서 결국 집단농장과 협동농장을 해체하고 농가별 책임경영체제로 전환한 것은 이 때문이다. 자본주의적 대기업 농업생산 경영도 동일한 문제를 안고 있다.

규모의 경제 작용의 한계

농업생산의 경우 규모의 경제가 작용하기는 하지만 그 범위가 있다. 가족경영으로 생산과 노동과정을 통제할 수 있는 일정 범위를 초과하면 규모의 비경제가 작동된다.

원료 농산물의 고부가가치화 곤란

농산물은 먹거리로서 소득이 증가하거나 가격이 하락해도 수요가 상응해서 늘어나지 않는다. 식품은 생존에 필수적이지만 식품소비 취향은 각 지역의 문화적 다양성을 반영한다. 따라서 자본으로서의 획일적인 대량 생산이 어렵고 프리미엄급 생산물을 대량으로 생산할 수도 없다. 독점 생산에 따른 초과이윤 확보가 어려운 것이다. 특히 한국농업의 경우 대량의 외국농산물 수입으로 좁아진 국내시장에서 과일, 채소, 축산 등은 모두 과잉생산과 가격 폭락에 시달린다. 이익까지 바라지 않는 농민들도 나가떨어지는데 기업의 이윤추구가 가능하겠는가.

10 농정의 우선 순위는?

농지 확보와 지대의 부담

공업의 경우 토지는 부지 제공이라는 수동적 역할에 그치지만 농업생산에서는 토지가 절대적으로 중요한 생산수단이다. 토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구입하거나 지대를 지불해야 하는데 이에 따른 부담이 크다.

이러한 농업의 특수성들 때문에 농업에서 기술혁신은 집약화(Intensification), 가치이전(수탈, Appropriation), 고부가가치화(Valorization)의 형태를 띤다(Guthman, 2004: 64). 집약화는 비료(토양에 작용), 다수확품종(품종에 작용), 제초제(잡초에 작용), 살충제(해충에 작용) 관개나 온실(기후에 작용) 성장촉진제(동물의 성장리듬에 작용) 등을 사용해 생물학적 과정을 가속시키고 생산과정의 위험을 감소시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자본은 농업을 둘러싼 전후방산업, 즉 농자재 생산, 농산물 가공, 농산물 마케팅 분야에서 독점적 지배력으로 농민과 소비자의 부담으로 높은 이윤을 올리려 한다. 가치이전 내지 수탈의 경우 농민들은 구입 자재(종자, 트랙터, 비료 등)와 농산물 유통자본에 의존하게 되고, 그 결과 농민이 누릴 부가가치는 자본에게로 이전된다. 계약영농이 이러한 종류의 수탈의 극단적 형태다. 농부는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있지만 본질적으로 수탈당하는 노동자, 자신의 땅에 고용된 손이 되는 것이다. 결국 자본은 농업생산에 직접 뛰어드는 것은 제약과 위험이 따르므로 회피하고 농자재 생산과 농산물 가공 판매 등을 통하여 이윤을 올리는 방법으로 농업을 지배한다.⁸⁾

정부의 대기업 농축산업 진출 촉진정책은 이러한 농축산업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추진성과 미흡, 농지투기 조장, 정부 보조금 낭비 등의 부작용만 초래할 수 있다.

2) 과잉공급으로 시장 교란

(1) 파프리카, 토마토 과잉 공급으로 농가경영 악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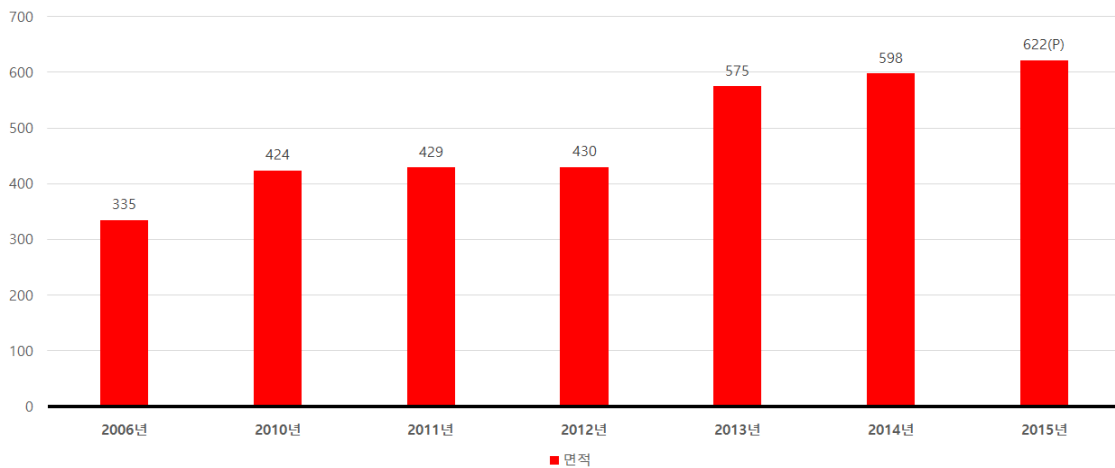
기업이 시설원에 분야에 진출하면 유리온실에서 생산되는 파프리카나 토마토 등이 농민들의 생산과 경합하여 시장가격을 저하시킬 것이다. 자본여력이 있는 대기업이니까 시장 진입 후 몇 년간 덩핑을 하면서 시장을 장악하려 할 것이다. 그러다가 많은 농민들이 생산을 포기하면 가격을 올려 수지를 맞출 것이다. 50ha 생산단지에서 연간 1만톤 가까운 파프리카가 생산되면 2015년 현재 2만9천톤의 수출물량을 두고 일반농가와 저가경쟁이 이뤄져 결국 국내 과잉공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LG는 스마트팜이 자신들이 생산하는 농자재를 실증하기 위한 단지라고 하지만 50ha라는 설비 규모가 농자재 실증단지라고 하기에는 너무 크다. 지난번 추진했다가 농민들의 반발로 무산된 팜한농의 유리온실 규모는 10.5ha였다. 467억원이 투자된 팜한농의 유

8) 이상 농업생산분야에서 자본주의적 기업농의 한계와 가족농 존속의 이론적 근거에 대해서는 가족농장상환, “대기업 농업생산 진출 비판”, 『자본의 세계화와 한국사회의 계급구조 변화』, 한울, 2015, 89-95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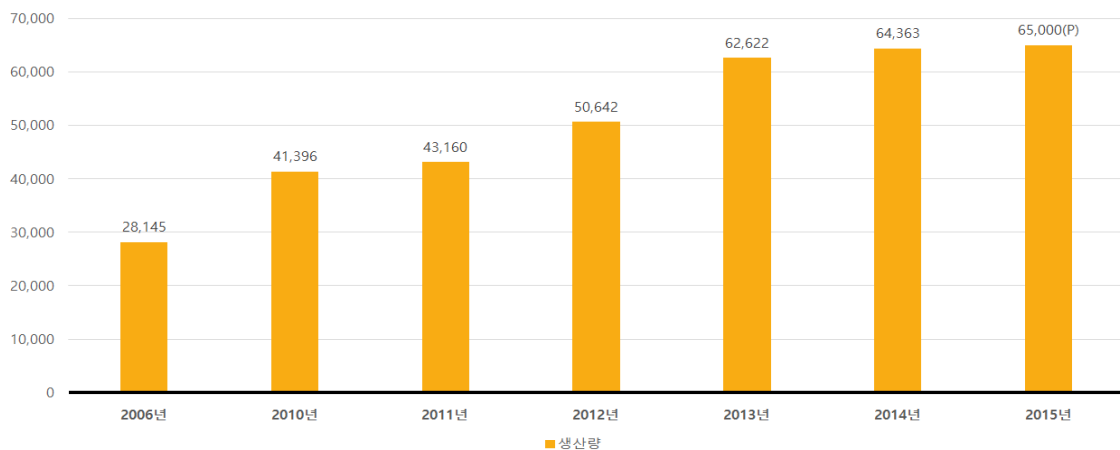
리온실을 그 후 우일팜이 170억원에 인수했다. 우일팜은 당초 유리온실에서 생산된 토마토를 전량 수출하겠다는 계획을 이어 받았지만 동부에 비해 약한 브랜드와 취약한 판로로 일부 토마토만 수출하고 더 많은 물량을 국내에 풀고 있다. 우일팜에서 연간 생산하는 토마토 5000톤 중 약 80% 가량인 4000톤이 도매시장과 대형 마트 등으로 풀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토마토 소비량 연간 45만톤 중 1%에 불과한 규모지만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 우일팜의 토마토 시중 공급과 최근 토마토 가격 하락세에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농산물유통공사(AT)에 따르면 토마토 10kg 평균 도매가격은 7월 15일 현재 1만54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만1320원에 비하면 27.8% 하락한 수준이다. 가격이 하락한 만큼 토마토 재배 농가가 피해를 입는 것이다. 우일팜 유리온실의 5배나 되는 50ha에서 생산될 물량에 대해 수출용 토마토와 파프리카를 생산하는 농민들이 크게 우려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림 1. 파프리카 재배면적 추이(단위: ha)



한국파프리카생산자자조회, “파프리카의 현장적용 가능 및 생산자 주도형 가공 기술개발”, 2016. 7. 5

그림 2. 파프리카 생산량 추이(단위: 톤)



12 농정의 우선 순위는?

그림 3. 파프리카 내수 및 수출 물량(단위: 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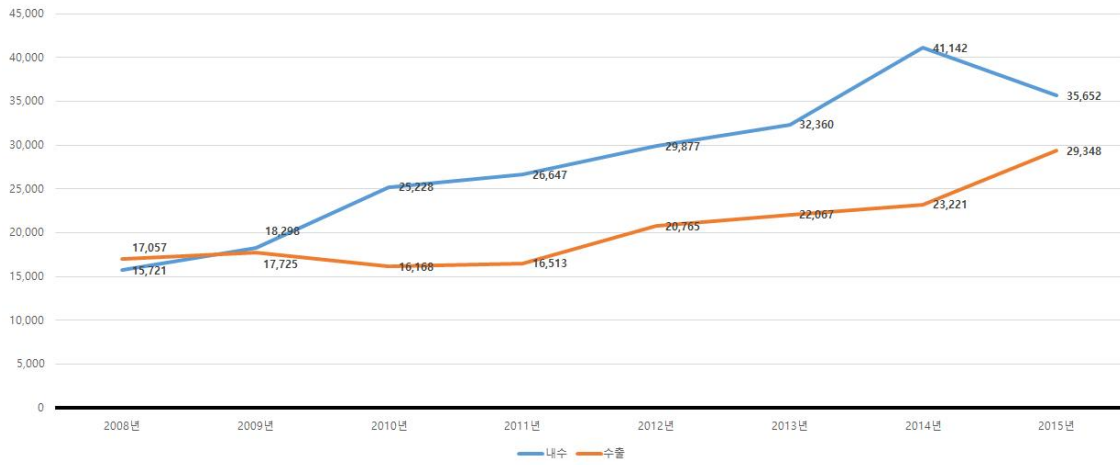


그림 4. 가락시장 파프리카 단가(원/k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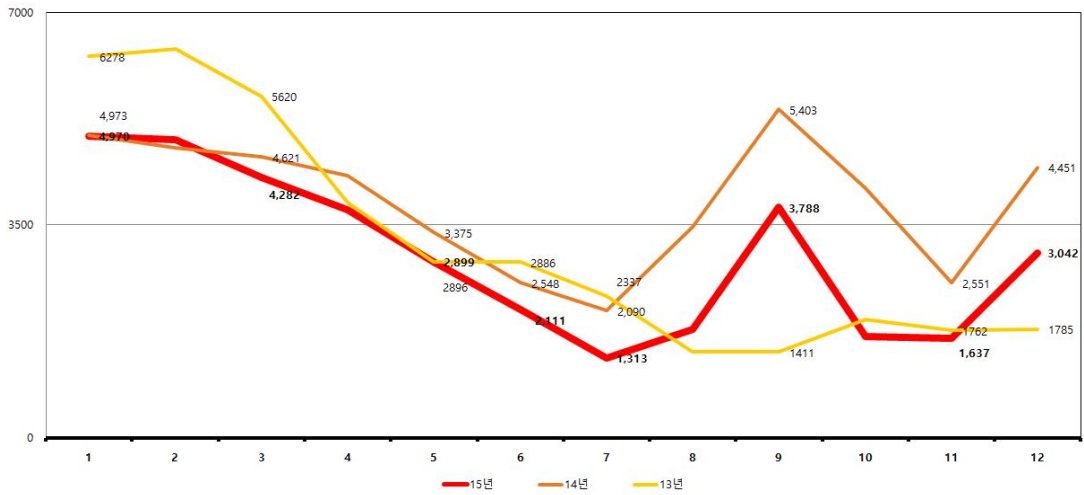


표 2. 파프리카 생산량 및 가격 변동(단위: ha, kg/10a, 톤)

연도	재배면적 (ha)	단수 (kg/10a)	생산량 (톤)	연평균 도매가격 (빨강, 원/5kg 상자, 상품 기준)
2011	429	10,061	43,160	29,004
2012	430	11,777	50,642	31,460
2013	575	10,891	62,622	26,018
2014	598	10,763	64,363	24,322
2015	707	10,324	72,950	19,699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015 시설채소 온실 현황 및 채소류 생산실적』, 2016. 8.

표 3. 시설 토마토 생산량 및 가격 변동(단위: ha, kg/10a, 톤)

	재배면적	단수	생산량	연평균 도매가격 (원/10kg 상자, 상품 기준)
2011	5,850	6,294	368,224	25,217
2012	6,344	6,822	432,779	26,868
2013	6,054	6,419	388,624	25,498
2014	7,070	7,072	499,960	22,127
2015	6,976	6,551	456,982	19,676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015 시설채소 온실 현황 및 채소류 생산실적』, 2016. 8.

표 4. 파프리카 소득, 생산비 추이(원/10a)

	조수입	중간재비	경영비	소득	생산비	소득률(%)
2010	40 676 643	22 754 649	25 370 346	15 306 297	29 507 074	37.6
2011	43 065 024	25 587 944	28 438 417	14 626 607	32 334 125	34.0
2012	42 632 143	25 890 650	28 769 925	13 862 218	33 373 616	32.5
2013	41 104 980	22 412 002	25 434 473	15 670 507	28 588 453	38.1
2014	42 430 164	23 565 197	26 547 591	15 882 574	30 319 646	37.4
2015	40 448 323	21 778 261	26 309 632	14 138 692	29 994 772	35.0

자료: 농촌진흥청, 『농산물 소득 년도별 생산비 자료』, 2016.

표 5. 시설토마토 소득 생산비 추이(원/10a)

	조수입	중간재비	경영비	소득	생산비	소득률
2010	18 159 159	8 238 830	9 265 268	8 893 891	12 518 926	49.0
2011	17 673 200	8 299 191	9 738 410	7 934 790	12 935 367	44.9
2012	21 683 077	10 320 395	11 939 528	9 743 549	15 903 091	44.9
2013	26 832 960	13 046 902	15 684 160	11 148 800	20 769 809	41.5
2014	25 673 296	10 716 240	13 247 892	12 425 404	18 560 974	48.4
2015	25 757 155	10 499 197	12 759 697	12 997 458	17 829 625	50.5

자료: 농촌진흥청, 『농산물 소득 년도별 생산비 자료』, 2016.

14 농정의 우선 순위는?

파프리카 성출하기(6월-7월, 10월) 매년 가격 급락 반복. 2016년 7월에는 유통협약으로 1,000톤 폐기(매몰) 예정. 하등품과 선제품의 재래시장 등 시중 유통으로 가격 질서가 교란되었다.

전남 화순군 도곡면 파프리카영농조합법인 소속 파프리카 농가들의 판매단가와 농가수취가격은 2012년 이후 뚜렷한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다.

표 6. 도곡면 파프리카 농가의 판매단가와 농가수취단가 추이(원/kg)

	판매단가	농가수취단가
2011.8-2012.7	4,836	4,047
2012.8-2013.7	4,136	3,342
2013.8-2014.7	3,818	3,080
2014.8-2015.7	3,434	2,661
2015.8-2016.7	3,221	2,450

자료: 도곡파프리카 영농조합법인, 「출하내역서」, 각년도.

표 7. 도곡 파프리카 영농조합법인 농가의 출하량과 매출액 추이(단위: kg, 천원)

	A농가		B농가		C농가		전체농가	
	출하량	매출액	출하량	매출액	출하량	매출액	출하량	매출액
2012	24,399	557,840	86,922	2,045,344	27,571	678,795	480,139	11,092,070
2013	25,821	561,628	84,244	1,730,706	29,413	615,834	480,025	9,923,374
2014	18,987	370,613	93,045	1,770,180	27,451	529,325	595,698	11,383,785
2015	18,028	278,079	92,209	1,400,603	26,143	429,655	539,989	8,643,332
2016	15,963	254,583	89,258	1,408,790	20,263	348,236	394,941	6,485,752

매년 1월-12월의 수치임. 단 2016년은 7월까지의 수치로 11월 12월분이 포함되지 않음.
 자료: 도곡파프리카 영농조합법인, 「농가별 생산현황」, 각년도.

도곡면 파프리카영농조합법인의 원가분석에 의하면 하절기(4-10월) kg당 4,195원, 동절기(12-3월) kg당 4,375원으로 추산되었다. 이에 따르면 2013년 이후에는 판매단가가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경남 가고파 수출영농조합법인 농가 수지 추이

		3000평 (유리 1500 비닐 1500)	2,200평 (유리 1400, 비닐 800)	유리 2,700평	유리 1500평
2012.8 - 2013.7	평당 생산량(kg)	40	60	69	47
	단가(원/kg)	3,589	4,027	4,208	3,542
	평당 조수익	161,833	236,898	291,215	165,932
	평당 지출	-	-	-	-
2013.8- 2014.7	평당 생산량(kg)	57	72	69	57
	단가(원/kg)	3,506	3,392	3,578	3,247
	평당 조수익	191,605	216,472	217,297	160,649
	평당 지출	120,613	116,536	114,343	89,106
2014.8- 2015.7	평당 생산량(kg)	66	67	61	68
	단가(원/kg)	3,318	3,049	3,240	3,209
	평당 조수익	218,845	203,928	199,053	218,996
	평당 지출	127,908	104,869	112,946	93,665
2015.8- 2016.6.18	평당 생산량(kg)	66	64	65	64
	단가(원/kg)	3,244	3,142	3,156	3,196
	평당 조수익	218,116	201,392	204,796	205,103
	평당 지출	128,896	112,110	108,886	95,357
	평당 순수익	89,220	89,282	95,910	109,746

지출에는 종자, 농자재, 박스, 선별, 수수료, 난방비, 가스, 양액, 인건비(700평당 1명)를 포함. 시설감가상각비와 수리비 등은 포함되지 않았음.

자료: 가고파 작기별 경영비 분석자료, 각년도.

표 9. A농가의 연도별 출하량 및 출하금액 추이

	출하 물량(kg)	출하 금액(원)
2011	262,135	1,117,491,371
2012	267,130	1,276,215,937
2013	326,165	1,451,131,566
2014	301,172	1,085,672,403
2015	330,182	1,079,451,823
2016	268,571	985,925,424

파프리카 시장은 수출이 40%, 내수가 60%정도인데 수출시장은 거의 일본이다. 네덜란드에서는 유럽 여러 국가로 수출할 수 있지만 한국은 일본에 95%를 수출하고 대만에 5%내외 수출하는 정도이다. 중국으로의 수출은 중국산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낮아서 개척하기 어렵다.

한국 내수시장의 경우도 동기작(7월 파종, 8월 정식, 11월초부터 첫 수확)과 하기작이 겹쳐서 가격이 하락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10월 11월과 5-7월에는 동기작

16 농정의 우선 순위는?

과 하기작 출하가 겹친다. 과잉생산을 면할 수 없고 위 표에서 보는 대로 가격이 하락한다. 12월-다음해 2월간에는 일조량이 적어 생산이 감소하여 가격이 상승한다. 현재 생산량은 이미 적정량을 넘었다. 과잉시 폐기할 수밖에 없다. 가공기술은 아직 발전되어 있지 않다.

(2) 대기업 축산업 진출의 문제점

대기업 축산 진출에 따른 대량사육은 질병의 위험을 가중시키고 대기업 축산업체는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항생물질을 대량 사용할 수밖에 없다.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대기업 축산업체는 투입 사료를 줄여 비용을 절감하고자 성장촉진제를 사용하고자 하는 유인에 쉽게 넘어간다.

대기업 축산업체는 외부불경제를 초래하여 생태 위기를 심화시킨다. 대기업 축산업체가 배출하는 대량의 축산분뇨는 인근 농가와 협력하여 처리하기 어렵다.

축산 계열화가 심화되면 대기업 위주의 시장 주도로 사료곡물가격 상승분이 사료 판매가격에 전가되는 등 양축농가의 경영비 증가 및 기업 종속화가 우려된다.

대형 유통업체가 직접 사육 및 생산에 참여함으로써 수직계열화가 진행된다면 축산농가의 입지가 좁혀지는 동시에 농협의 축산물 판매사업과 경쟁구도를 형성할 가능성이 크다.

3) 기업농은 경제성이 없다

기본적으로 한국에서는 유리온실의 경제성이 없다. 농촌진흥청의 조사연구에 의하면 2006년 현재 유리온실에서 파프리카를 재배할 경우 정부의 지원이 없다는 가정 하에 ha당 조수입 약 4억원에 대해, 광열동력비가 1억원, 농기구시설 상각비가 1억3천만원, 제재료비 기타 1억4천만원, 고용노력비 6천만원, 지불이자 4천만원 등 비용이 4억8천만원으로 소득이 8천만원 정도 적자가 난다.⁹⁾ 정부의 보조금으로 유리온실을 지워놓았을 경우 매몰비용으로 시설비를 계산하지 않을 경우 조금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것이다. 더욱 정교한 시설이 소요될 스마트팜은 정부 지원이 없으면 일반 유리온실보다 더 큰 적자를 볼 것이다.

정부도 이를 알고 막대한 지원을 약속하고 있다. 2015년 8월 18일 농림축산식품부는 200억원을 들여 추진하는 '수출전문 스마트팜 온실신축사업' 지원 대상자로 우포그린 등 6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사업체당 온실 규모는 1-2ha로서 ha당 30억원(3.3m² 당 1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스마트팜 온실 신축비용의 50%를 국고에서 보조하고 30%를 융자해주는 조건이다. 농기구 시설상각비의 절반을 정부보조로 메꾸어주면 적자를 간신히 면할 것이고 LGCNS 등 기업들도 역시 같은 지원을 기대할 것이다. 막대한 보조금 지원을 바탕으로 스마트팜이 일반농민들의 시장을 잠식토록 하는 것은 정부가 나서서 불공정경쟁행위를 조장하는 것으로 당장 중단해야 한다.

9) 장상환, "대기업 농업생산 진출 비판", 『자본의 세계화와 한국사회의 계급구조 변화』, 한울, 2015, 96-99쪽

표 10. 경남 P농가의 생산실적 추이

작기	총매출	생산량(kg)	재배면적(m ²)	kg당 단가	m ² 당 생산량	근로자수
2012	2,257,791,850	485,575	36355	4,649.73	13.35648	13
2013	2,228,786,255	547,805	46270	4,068.58	11.83931	18
2014	2,156,247,776	567,795	46270	3,797.58	12.27134	18
2015	1,763,756,922	526,710	46270	3,348.63	11.3834	22

자료: 필자 조사에 의함.

면접에 응한 대부분의 농가는 자동 제어 기술이 도입되는 유리 온실의 경우에도 작물의 생육상태를 면밀하게 관찰할 필요가 있는데 한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면적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시설원에 가족농의 적정 규모는 3000-5000평이라고 한다. 한국파프리카자조회 가입자격은 그동안 200명이었는데 현재는 3000평으로 올랐다.

P농가는 재배하고 있는 파프리카를 모든 줄마다 꼼꼼히 살펴보지 않고 몇 줄 가운데 한 줄만 살펴보다 보니 2012년의 11천평에 비해 재배면적을 15000평으로 확장한 2013년에 m²당 생산량이 전년도의 13.4kg에서 11.8kg으로 감소했다고 한다(P농가 면접, 2016. 10 13).

P농가는 그동안 비닐하우스 온실 15000평에서 파프리카를 재배해왔는데 2016년 기존의 농장과 십여km 떨어진 곳에 8000평 규모의 측고 6m 침단 유리온실을 건립하였다. 2만3천평 규모의 대규모 재배농가가 된 것이다. 그런데 이 농가의 경우 경영주 부부와 장남 부부와 차남 부부 총 6명이 두 농장을 세 사람씩 나누어 경영을 하고 있다. 경영주가 은퇴하면 장남이 현재의 15000평 비닐하우스 농장의 경영주, 차남이 8000평 유리온실 농장의 경영주가 될 것이다.

유리온실 건설업자가 유리온실을 건립하는 경우도 있었다. 현재는 전문 재배사를 고용하여 경영하고 있지만 막대한 자본을 투자해놓았기 때문에 스스로 전업농이 되어서 경영할 계획이라고 한다. 현재도 경영주가 노력의 90%를 유리온실 경영에 투입하고 있다는 것이다.

농업외부 기업이 자본을 투자하여 유리온실을 지으면 온실을 관리할 사람을 고용해야 한다. 문제는 이 고용된 관리자가 자작농처럼 기업 농장을 자기농장처럼 섬세하게 관리하겠느냐 하는 점이다. 농가는 생산과 판매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생산관리를 하는 반면

4) 농가 주도의 농업기술 발전

기업농 농업생산 진입 찬성론자들은 자금력 있는 기업이 대규모 투자를 해야 ICT를 활용한 농업기술이 발전할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그동안 시설원에 농업기술은 농가 주도로 크게 진전되었다. 최근에는 생산성 향상을 위해 정부 보조금을 받지 않고, 장기 저리 융자 혜택을 보지도 않고 최첨단 유리온실을 건립하는 농가가 늘어나고 있다.

18 농정의 우선 순위는?

농민들은 측고 6m의 첨단 유리온실을 건립하고 있다. 4000평 내지 8000평의 대규모 유리온실을 짓는다. 측고 4m의 유리온실에서 평당 30-40kg을 수확하는데 비해 파프리카를 평당 70kg 생산한다. 월 100만원씩을 지급하고 시설원예 전문 컨설턴트를 고용하여 생산량을 올리고 생산비를 절감하려 한다.

시설원예 농민들은 원격제어 기술도 이전부터 이용해왔다. 해외여행을 갈 경우 노트북을 들고 다니면서 원격으로 환경을 제어했다. 스마트팜은 노트북 대신 스마트폰을 이용한다는 차이가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5. 대기업 농업 진출 규제 방안

1) 대기업 진출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방안

농업생산 분야에 대해 일정 기준 이상의 재벌 및 대기업이 참여할 수 없도록 법률을 마련하는 것이다. 마치 중소기업 고유업종과 같이 농업생산은 농민(농가)의 고유분야로 법률로 지정하여 향후 재벌 및 대기업이 농업생산 자체를 고려할 수 없도록 막는 것이다.¹⁰⁾

김우남 의원 등은 2014년 7월 23일 축산법 개정법률안을 통해 대기업 축산 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대책을 내놓았다. “제27조(축산업의 참여 제한) ① 축산농가의 경영안정과 생산기반 유지를 위하여 상시 근로자 수 200명 이상, 연매출액 200억원 이상 또는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기업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육 규모 이상의 축산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기업의 진출 조건을 까다롭게 하는 방안도 있다. 박민수의원은 2013년 12월 26일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제39조의2(대기업의 농어업 영향평가서 등 제출) 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농어업을 영위하려는 경우에는 농어업 영향평가서 및 농어업인 상생협력계획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진출조건을 까다롭게 하는 방안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그것보다는 축산법을 개정하여 대기업 진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미국에서도 사우스다코타, 노스다코타, 오클라호마, 아리오와, 미네소타, 위스콘신, 메브라스카, 미주리, 캔자스 등 9개 주에는 가족농 보호를 위해 기업농(corporate farming)을 금지 내지 제한하는 반기업농법(Corporate Act)을 채택하고 있다.¹¹⁾

10) 장경호, “LG 사업추진 중단이 남긴 것은 무엇인가 - 대기업의 농업 진출을 이해하는 관점 -”,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너름 제250호 이슈보고서, 2016. 10. 4

11) 이수미, “가족농 보호를 위해 기업농을 금지 규제하는 미국 반기업농법”,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너름 제251호 이슈보고서, 2016. 10. 7.

2) 농업회사법인에서 비농업인의 투자 지분 제한 강화

영농조합법인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근거하여 설립할 수 있으며 농업인으로 구성된 발기인이 5명 이상이어야 한다.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비농업인도 조합원이 될 수 있으나, 준조합원으로 해야 되며 의결권이 제한된다.

반면 농업회사법인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거 농업의 경영이나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하며, 합명회사·합자회사·주식회사·유한회사 모두 가능하다. 농업인 1인 이상 이면 가능하고, 주주들을 자유롭게 모집할 수 있다. 비농업인의 출자지분이 총출자액의 90%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총출자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총출자액에서 8억원을 제외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농업회사법인은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또는 등기 이사가 3분의 1 이상 농업인일 경우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농지법 제2조).

농업인이란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에 의거,

- 1) 1천제곱미터(300평)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 3)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 4)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 유통·가공·수출 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 5)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을 말한다.

위의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기업들은 이미 농업회사법인을 활용하여 농업생산과 축산업에 진출하고 있다. 비농민의 출자지분을 90% 이내로 하고 있는데 이를 기반으로 비농업 자본이 농업경영에 얼마든지 합법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것이다. 축산분야, 특히 양돈 분야에서는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경종부문에 비농업 자본이 변로 진출하지 않은 것은 재배과정에서 위험부담이 크고 가격이 불안정한 등 수익 조건이 좋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첨단 시설원예분야, 밀폐형 식물공장 등에서 재배 위험을 줄이는 기술이 발전한다면 비농업 자본이 이 회사법인의 규정을 활용하여 진출하려할 것이다. 농축산업 생산분야에 기업의 진출을 막기 위해서는 경영주의 자격을 농업인으로 한정하고, 비농민의 출자지분을 회사를 지배할 수 없는 50% 이하로 제한하도록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¹²⁾

3) 계열화사업에 따른 대기업의 농가지배를 규제하는 방안

대기업의 축산업 진출을 원천적으로 금지해도 사료업체나 가공업체가 계열화를 통해 농가를 지배하는 것은 막을 수 없다. 계열화 농가에 대해 사료값 등 사육비 인상의 강제하고 농가의 투입노동과 시설에 대한 비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 구매가 책정 등으로 농가의 경영을 악화시킬 수 있다.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규제

12) 장경호, "LG 사업추진 중단이 남긴 것은 무엇인가 - 대기업의 농업 진출을 이해하는 관점 -",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너름 제250호 이슈보고서, 2016. 10. 4.

20 농정의 우선 순위는?

이루어져야 한다. 표준거래약관을 정하고 이를 이행했는지 정부기관과 농민단체 등을 통한 모니터링이 필요하고 불이행시 강력하게 제재할 필요가 있다.

4) 사료생산과 농축산물 가공, 유통에서 협동조합 강화

사료생산과 농축산물 가공, 유통 분야에서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대기업과 대결하여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시설원예 및 축산농가의 협동조합 조직력과 사업이 강화되어야 한다.